스위스發 1조8000억 주인 누구냐

금감원 "자금 출처 확인 방법 없다"… 실체 확인 미궁 빠질 듯

절반은 '검은 머리 외국인' 음성자금 추정

스위스 비밀계좌에 있던 1조8000억원대의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돈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 당국이 이 돈의 주인을 공개하지 않는 데다 외국인의 주식매매 동향을 관리하는 금융감독당국마저 실체 확인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은 온갖 의혹만 남긴 채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상한 돈의 국내 유입 사실은 스위스 국세청이 제3국 거주자의 자금이라며 우리나라 국세청에 58억원의 세금을 환급하면서 드러났다.

한국과 스위스 간 조세조약에는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의 15%를 한국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되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에게는 20%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스위스 국세청이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배당금의 15%만 낸 투자자 중 제3국적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덜 낸 세액 5%에 해당하는 58억원을 걷어서 한국 국세청에 보내준 것이다.

세금 누락기간, 연간 배당세 누락액, 시가배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스위스에서 배당세를 추가 과세한 투자자금의 원래 규모는 최대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절반 정도는 국내 음성자금, 즉 '검은 머리 외국인'이 스위스에 숨긴 돈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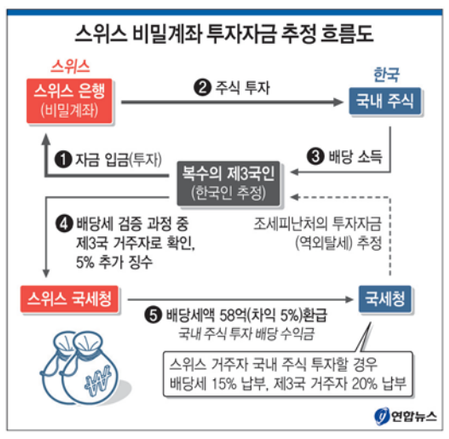
세율이 낮지 않은 스위스를 거쳐 국내에 투자했다면 신분 노출을 꺼린 한국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 돈은 국내 대기업의 국외비자금이나 재벌의 재산도피 자금, 정치자금 등일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돈의 실제 주인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스위스 국세청이 계좌 내역을 보내주지 않는 한 우리 국세청이 단독으로 자금 추적을 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자금 유출입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금융당국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그나마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스위스 조세조약의 개정안이다. 이 법안에는 기존 조세조약에 개인이나 기업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난관은 여전히 남는다. 스위스 당국이 계좌 내역을 통보해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상한 자금의 실체를 보여주는 진실의 문을 열 수 있을지는 스위스 당국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연합뉴스

U대회 수영장 입지 논란 2라운드

이용섭의원, 강운태 시장에 "수완지구에 건립" 공문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16일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시설인 수영장을 애초 계획대로 '수완 국제수영장'으로 건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또다시 입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장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장에게 보낸 촉구문에서 "수완수영장의 애초 계획을 변경하려는 최근 광주시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광산구민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미 남구에서는 수영장이 남구로 유치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칙 없고 투명성이 결여된 광주시의 밀실 행정으로 인해 수영장 건립 문제가 지역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안대로 수완수영장으로 추진해 지역간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 신뢰를 회복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광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U대회를 치르려면 염주 수영장외에 추가로 2개의 수영장이 필요하며 이들 수영장의 입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최종 입지는 접근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여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의 협의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광산구가 지역구인 김민종 광주시의원은 지난 4월 시정질의에서 "대회 경기시설인 수영장과, 체육관은 광산구 수완동과 신촌동 일원에 건립하기로 내부적인 절차가 진행돼 오다 지난해 강운태 시장 취임 후 방침이 급선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광주시가 지난해 2월과 7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는 수완수영장과, 어등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 보고했으나, 올해 2월 업무보고에서는 지명을 뺀 수영장과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보고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펴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경기시설 입지를) 변경하려 한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해 입지 논란이 일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전남도립도서관 개관 차질 우려

행안부 신규 채용 난색 인력 30명 확보 못해

전남도가 지방채까지 발행해 건립 중인 도립도서관이 운영 예산은 마련했으나 관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도서관 개관에 차질이 우려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도청 주변 무안 남악신도시 주변 2만7610㎡ 부지에 1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도립 도서관을 건립 중이며 오는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도립도서관은 장서실과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영상자료실이 들어서며 갤러리와 세미나실 등도 갖출 계획이다.

전남도는 연말까지 도서관을 개관하기로 하고 기본 장서 확보와 디지털도서관 구축, 가구, 기자재 구입 등에 따른 세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지방채 35억원을 발행했고 운영비 32억원을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해 지난 14일 도의회 상임위 예산 심위도 통과했다.

그러나 도립도서관을 개관하고 운영할 최소 인력인 30명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신규 인력 채용에 난색을 표하면서 전남도가 요구한 운영인력 확보 요구도 받아 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올해 추경에서도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했다. 전남도가 도서관 건물 세우는 데만 집중하고 인력과 장서 확보에는 뒤늦게 대응하다 도서관 개관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인규 겸손 몰라" VS "수사기록 공개하면 될것"

'노 전대통령 수사' 檢-문재인 충돌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검찰과 노 전 대통령측간에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당시 사건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4일 펴낸 '문재인의 운명'에서 "검찰은 박연차 회장의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며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를 향해 "대단히 건방졌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다.

이에 이 변호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무수한 증거가 수사기록에 많이 남아 있으니 (문 이사장측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될 것"이라며 반박하자 문 이사장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양측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문 이사장은 16일 이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뉴저지내 주택 구입 사실을 언급한데 대해 "이미 다 나온 내용을 들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여부인데,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검찰이)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수사 기록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비공개 신청을 했느냐"며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예우를 다 했다. 공손하게 잘 모셨다"고 말한 데 대해 "겸손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이 변호사는) 겸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 친노 핵심 인사도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 무리한 수사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 커녕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것은 사자(死者)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이러니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내사가 종결된 사안인만큼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박 전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한 사건 21건 중 19건이 유죄로 인정된 점만 봐도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이 16일 최근 출간한 '문재인의 운명'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 헌정하고 있다. 지난 14일에 발간된 '문재인의 운명'은 문재인 이사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 및 참여정부 5년의 기록, 비화 등을 담은 책이다. /연합뉴스

'재산 29만원' 전두환 600만원 항소장 제출

'이신범·이택돈 10억 배상' 판결 불복
이 전의원, 이학봉씨 집 강제경매 신청

남은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버텼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백만원짜리 인지(印紙)가 붙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 자금 출처에 의문을 낳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계엄사령관 당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지낸 이학봉 씨와 공동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인지대금이 608만25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판결 확정 전에라도 10억원의 지급을 임시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이학봉 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에 대해 16일 부동산 강제경매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 선고됐으나 올해 1월 기준으로 1672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1980년 5~6월 전두환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이학봉 씨는 합수부 수사관들에게 지시해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을 영장 없이 잡아가둬 수사하게 했다. 이들은 수사관에게 고문을 당하다 범행을 자백했고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신범 전 의원은 2년7개월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 두 사람은 1985년과 1987년 특별사면을 받고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